

등촌동 워크샵 01

요동치는 세계 경제,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19시

장소 : 공공운수노조 회관 2층 교육장 (모아홀)

주최 :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문의 : pssp4001@gmail.com



발제 :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등촌동 워크샵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워크샵입니다. 이후 다양한 쟁점을 주제로 정기적인 워크샵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동치는 세계경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과 과제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1. 들어가며: 요동치는 세계경제 정세

1) 2022년 정세 개괄

(1) 코로나19를 지나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맞이한 세계경제

-코로나19는 긴 터널을 지나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화)으로 전환되고 있음. 2개 이상 대륙에서 전염이 확산되는 WHO감염병 경보 6단계 중 최고단계 팬데믹에서 특별한 방역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계절적으로 혹은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처럼 대응 체계가 바뀌는 중.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엔데믹 선언을 했고, 세계보건기구(WHO) 아드하눔 거브리여수스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낮아졌지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 경제마비에서 고물가-고금리로의 위기 양상 전환이 그것.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방어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정책과 양적완화¹⁾를 시행. 경제적 응급처치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리며 순식간에 고물가-고금리 국면으로 돌변. 그 결과 현재 40년 만에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세계경제를 침식했던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22년 6월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8.1%로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독일 50년만의 최고치 소비자 물가지수 2022.5 7.9%상승 등 전세계가 고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음.

-미국 연준은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75bp인상) 등 1년 간 425bp 인상시키며 기준금리를 2022년1월 0.25%에서 12월 4.50%로 급격히 끌어올림.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자본 유출 우려가 있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 급격하게 금리 인상²⁾.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유례 없던 일이고, 자국 금융시장 보호를 위한 조율되지 않은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을 안고 있음.

1)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경기과열 혹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함.

양적완화(QE)란 저금리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새로 통화를 발행하여 국채, 회사채, 주식 등의 자산을 매입 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말함

2)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과 GDP대비 250%의 국가부채의 이자비용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일본 정도가 예외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경제

-이미 미중 패권대결로 탈세계화되던 공급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붕괴 가속화. 러시아는 결국 세계경제를 고물가-고금리 위기로 더욱 몰아넣음. 러시아는 에너지의 핵심 자원인 원유(13.0%), 천연가스(16.8%) 세계 2위 생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유럽으로 향하는 천연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이는 유럽지역 고물가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 전쟁 전과 전쟁 후 러시아의 에너지가 유럽 물가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배 상승. 유럽 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 갈등 요소가 확대.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냉각과 OPEC+의 원유 감산,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저가 매입 등 사례.

-러시아는 에너지 뿐 아니라 비철금속 자원도 풍부한 지역인데, 미국 내무부(DOI)가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지목한 35개 주요 광물 중 특히 팔라듐은 세계시장의 30%를 차지. 팔라듐 가격은 전쟁 발발 후 무려 80% 뛰었고, 이로 인해 향후 2년 간 유럽 연간 경량차 판매량 전망치가 200만대 하향 조정됨.

-전쟁은 곡물 부족, 가격 급등으로 저개발국가 중심 식량위기도 심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25%), 해바라기(60%), 보리(30%)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쟁과 경제제재로 수출이 막히고, 작황이 부진하면서 기아의 급등 원인이 되고 있음. 2002년 UN이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인구의 10% 정도인 약 8.2억명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후 1.5억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전쟁으로 더욱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구분	원자재	생산국 세계 순위 및 비중					비고
		1위	2위	3위	4위	5위	
에너지	원유	미국(14.9%)	러시아(13.0%)	사우디(12.4%)	캐나다(5.5%)	이라크(5.4%)	
	석탄	중국(50.6)	인도(9.2)	인도네시아(7.4)	호주(6.6)	미국(6.4)	러시아(5.3%) 6위
	천연가스	미국(23.8)	러시아(16.8)	이란(5.9)	중국(4.4)	캐나다(4.4)	
비철금속	구리	칠레(27.8)	페루(10.4)	중국(8.3)	콩고(7.8)	미국(5.8)	러시아(3.9%) 8위
	알루미늄	중국(57.0)	러시아(5.6)	인도(5.5)	캐나다(4.8)	아랍에미리트(3.9)	
	니켈	인도네시아(30.7)	필리핀(13.3)	러시아(11.3)	뉴칼레도니아(8.0)	호주(6.7)	
	아연	중국(33.8)	페루(11.1)	호주(10.9)	인도(6.0)	미국(6.0)	러시아(2.3%) 8위
	팔라듐	러시아(42.9)	남아프리카공화국(33.9)	캐나다(9.2)	미국(6.7)	짐바브웨(6.0)	
곡물	옥수수	미국(31.8)	브라질(21.5)	아르헨티나(19.5)	우크라이나(13.8)	EU(2.5)	
	밀	EU(18.5)	러시아(15.8)	호주(13.5)	미국(13.5)	우크라이나(9.8)	
희귀가스	네온	우크라이나(70)	-	-	-	-	

※ 2020년 기준

자료=미국 에너지정보청(EIA)-미국 지질조사국(USGS)-미국 농무부(USDA)-국제무역통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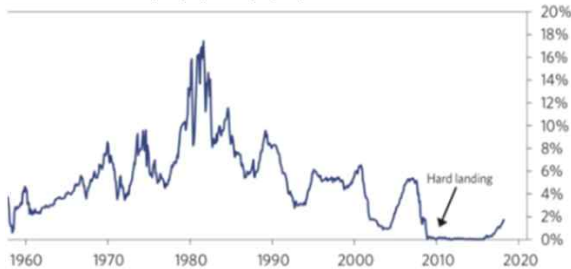
그림 1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주요 원자재 생산 현황

2) 의미와 전망 40 년(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 70 년(미국주도 UN 국제질서) 의 붕괴

(1) 40 년 전 시작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붕괴

-미국은 1,2차 오일쇼크 등으로 1980년 13.5% 고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았고, 폴 보커 미연준 의장이 1981년 21%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1980년대 이후 저금리-저물가 시대를 맞이함³⁾. 세계경제는 1970년대를 정점으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장기침체 국면이었고, 지배계급과 자본은 이윤 회복을 위해 금융 우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돌입하면서 세계 정치·경제·사회를 재편함.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실물경제 보다는 주식 시장(2000년대 닷컴버블), 부동산 시장(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 확대와 버블 붕괴를 반복해오고 있었음.

1960-2010년대 미국 금리 추이



미국 비금융기업부문 이윤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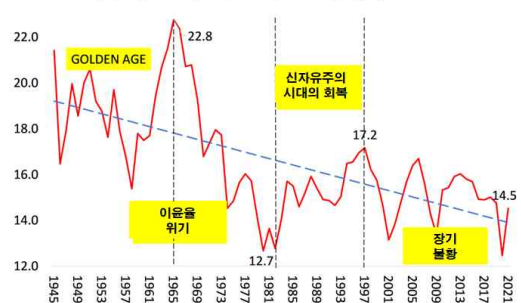


그림 2

자료출처: (좌)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amdon/222024661298>

(우)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

-이번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위기는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로 그럭저럭 버텨오던 세계경제가 또 다시 무너졌고, 장기불황 뿐 아니라 이윤율 하락을 역전시킬 마땅한 수단이 없음을 보여줌.

(2) 70 년 전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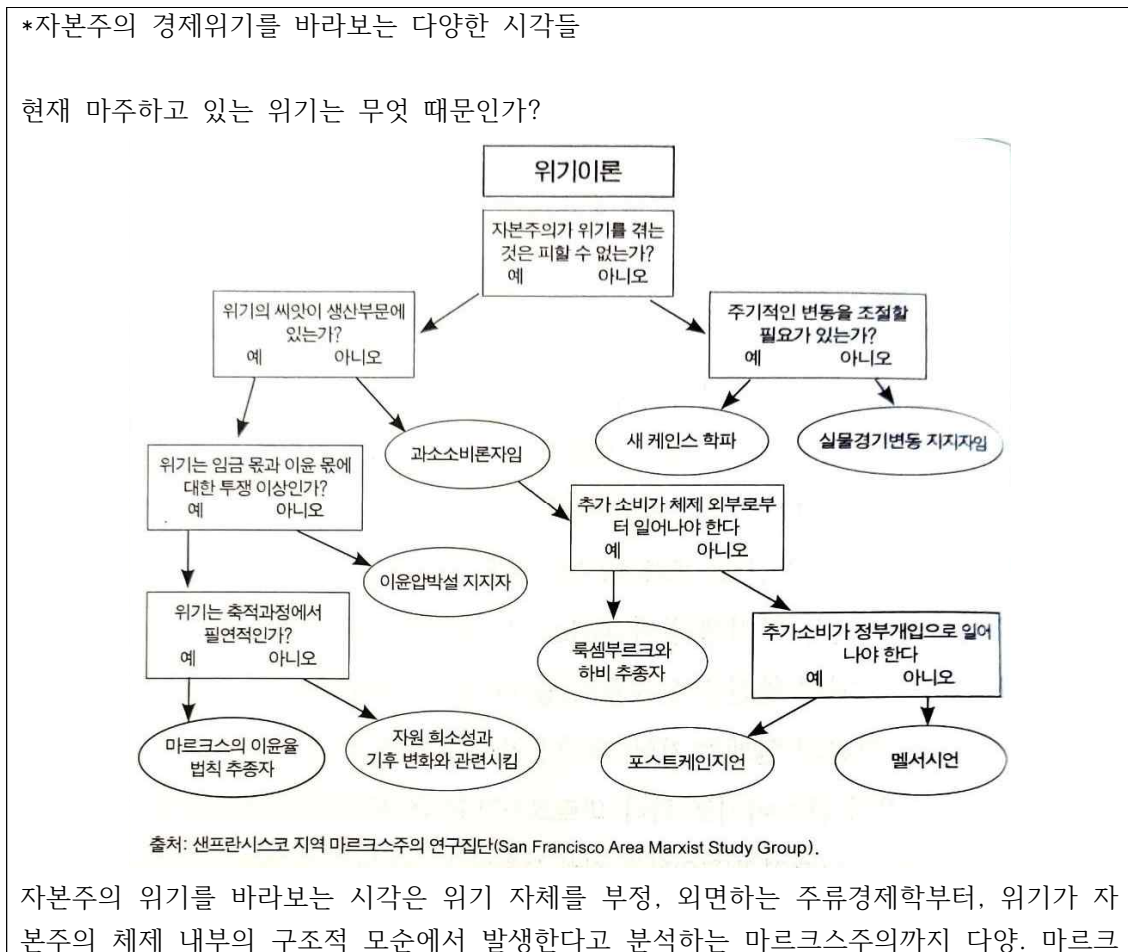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1945년 2차대전 이후 첫 유럽대륙의 전면전 재발의 의미.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새로운 국제 질서, 즉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전쟁 억제 체제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 세계체계분석의 개념을 빌어 미국 헤게모니 붕괴의 최종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인 카오스(Chaos)가 시작된 질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음⁴⁾.

3) 볼커 의장의 초고금리 정책은 긴축으로 인한 극심한 미국 내 경기침체와 남미 국가들의 외채위기를 불러일으키며 ‘볼커의 반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큰 고통을 수반했음.

-UN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구성원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제국주의적 논리로 타국 영토를 침략함으로써 시계를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려놓음. 독일은 국방비를 GDP 2%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재무장을 선언했고, 일본은 방어 수단으로써 ‘공격 능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국방 전략을 전환하고 있음. 200년, 74년 간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가입을 공식화.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193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체제이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유라시아 대륙 서쪽을 강타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라시아 동쪽 끝에 있는 동아시아에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70여년 간 전쟁이 없던 냉전 시기에 만연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깰 것이라는 경고가 대두⁶⁾.

2.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 자세히 살펴보기



4)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현재적 의미-알타 구상의 붕괴와 동아시아 위협의 대두(백승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2022년 11월 5일 등록

<https://kugnews.tistory.com/425>

5) 더 이코노미스트, 『2023 세계대전망』, 한국경제신문: 2003

6) 장원재, 이슈&인터뷰, “정치철학자 이진우 교수가 말하는 ‘전쟁과 평화’”, 월간조선 2022년 11월호

스주의는 표에 나오듯 그 원인을 두고 과소소비설, 이윤압박설,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 등 논쟁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음. 현대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논쟁은 실제 20세기 자본주의 위기가 발생하던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함⁷⁾. 세계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현 시기에 노동운동 내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한 논쟁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대안 마련에 역량을 투여해야 함.

1) 인플레이션 논쟁

(1)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

많은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양적완화를 실시한지 10년이 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의문. 우선 인플레이션 발생의 성격과 원인을 살펴봄.

① 인플레이션의 원인

총수요 ↑	총공급 ↑
한 나라에서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 총량으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순수출의 합 등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생산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으로 생산기술의 향상, 생산비용의 절감, 천연자원의 양, 노동인구의 증가 등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 > 총공급 -기업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 인상	[공급견인 인플레이션]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비용 고액 전가 -원자재비용, 인건비, 환율, 세금 등

② 이론적 논의

○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7) 이종규, 『경제위기: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2000

7) 더 이코노미스트, 『2023 세계대전망』, 한국경제신문: 2003

(전년동기대비, %)

	미국	영국	유로 지역	캐나다	브라질
2019년	5.1	1.9	5.5	7.2	7.7
2020년	19.0	11.6	8.7	15.4	24.7

자료: FRED, BOE, ECB, Bloomberg

그림 3 주요국의 통화량(M2) 증감률

(자료출처: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1-16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2021.7)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으로, 안정적 성장률과 화폐유통속도 하에서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Goodhart·Pradhan(2021) 등은 팬데믹 기간 중 이례적으로 음(-)의 GDP갭⁸⁾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수반하여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

○ 신케인지언(필립스 곡선) 접근법

-수요측면을 강조. 인플레이션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에 관계로 결정된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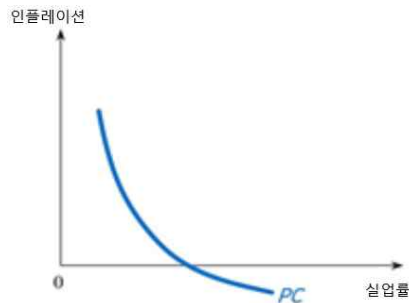


그림 4 필립스곡선

(자료출처: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 2021-16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2021.7)

○ 재정적 물가이론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 재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견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인상으로 추가 지출에 필요한 돈을 조달할 계획이 없다면, 정부의 ‘수입’은 기대수준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부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

예를 들면, 2020년대 중반 21조 달러 공공부채 존재. 소비자물가 11%급상승으로 부채 가치는 2.3조 달러(21

8) GDP갭=실질GDP-잠재GDP. 양(+)의 값이면 물가 인상 가능성이, 음(-)의 값이면 물가 하락 가능성이 높음. 이번 고물가가 이례적인 것은 GDP갭이 물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음(-)의 값이 컸기 때문.

조 달러*0.11=연방정부 수입)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과지출 4.1조 달러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에 19% 수준까지 물가를 올릴 수 있음. 물론 장기간에 걸쳐 이런 부채 가치 하락이 진행될 수 있음.

(2) 2008년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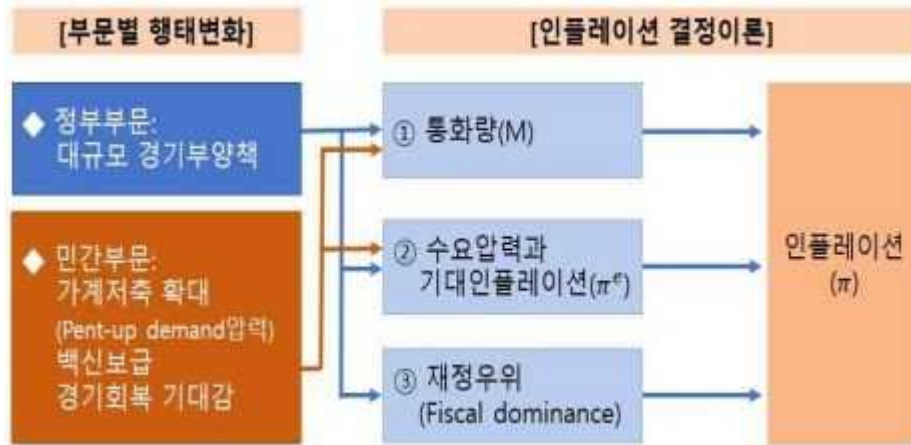


그림 5 부문별 행태변화와 인플레이션 결정이론
 (자료출처: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1-16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2021.7)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실에서는 통화량 확대, 수요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 재정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 그렇다면 왜 2022년 갑작스럽게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

① 2008-2020 인플레이션이 잠들어있었던 이유: 연준의 저성장 트라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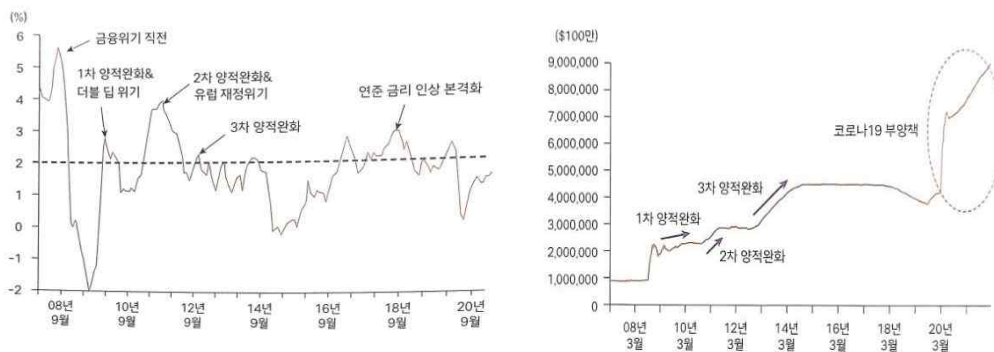


그림 6 (좌)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우)미국 재정정책 규모
 (자료출처: 오건영,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page2: 2022)

-그림6에서 보이듯 미 연준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후 금융위기 대응으로 5년여에 걸쳐 1,2,3차 4.8조

달러의 거대한 양적완화 시행. 하지만 경기회복의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지수의 뚜렷한 상승이 없었음. 2011년 유럽위기 시기 4% 정도가 예외. 미 연준은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음에도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자 금리 인상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즉, 저성장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는 회복되지 않는 자본의 이윤율 때문.

② 40년 만에 깨어난 인플레이션



그림 7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붉은색)와 기준금리(파란색)

-미국의 경우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해볼 수 있음. 첫째, 수요 측면. 강력한 정부의 경기부양책(현금지급, 저금리)은 수요를 폭발시킴. 둘째 공급 측면. 바이러스는 공급망을 붕괴⁹⁾시키고, 대량해고, 정부의 생계비 직접 지원으로 '대퇴직시대'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력난¹⁰⁾을 만들었으며, 셋째, 이러한 인력난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40년 만의 가장 빠르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킴. 거기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

③ 인플레이션 논쟁

○ 미국 정부 내 매파와 비둘기파 논쟁

-인플레이션 전조가 감지되던 2021년부터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인플레이션 관련 논쟁을 벌임.

-래리 서머스는 2021.2.5. 워싱턴 포스트 기고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9조 달러는 지나치게 큰 규모...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부양책은 GDP갭의 절반을 채우는데 그쳤지만, 이번 부양책은 GDP갭을 세차례 메꿀 정도로 크다”고 인플레이션을 경고. 즉, 육조에 물을 너무 많이

9) 크리스마스 선물 내년에 받을 수도... 미 댈친 '컨테이너 잭팟' <<머니투데이>>, 2021.10.12

10) 미 기업들 인력난 심화...4월 구인 930만명 '역대 최대' <<연합뉴스>>, 2021.6.9

부으면 넘친다는 것.

-재닛 옐런은 서머스의 경고에 2021.2.7 CNN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 우려...(대규모 재정정책을 하지 않
아)우리가 길고 느린 회복 과정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경기부양책은 내년에 우리를 ‘완
전 고용’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며 부양책을 옹호.

-제롬 파월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화상 대담에서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것”이며
“1960년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라고 응수. 물가상승세가 강
해지던 2021년 4월, 6월까지도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입장 고수. 연준의 안이함이 드러나는 대목.

-결국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 5월 13일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좀 더 일찍 올렸어
야 했다”며 실책을 부분적으로 인정.

○ 중앙은행의 역할 논쟁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 불러옴.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은 중앙은행이 금
리 조절 등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기 때문으로 진단했고, 닉슨 정부의 물가통제는 실패했다고 진단.

-1970년 8월 민주당 경제안정법 통과.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포괄적 임금-가격 동결 단행. 90일간 강제
로 일반 가격, 임차료, 임금 동결 발표. 가격위원회는 임금상승률 5.5%-인플레이션 2.5% 이내 동결 목표. 동
결 풀리자마자 가격, 임금 폭등하며 정부의 가격통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길이 열림.

-한국 사회운동 내에서도 정부의 가격통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실패 사례 교훈 참고해야 함.

(3) 위기의 양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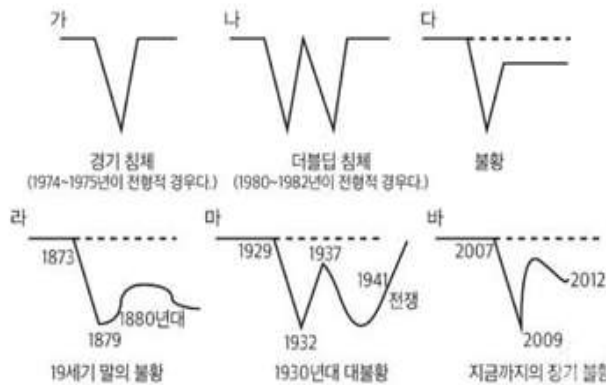


그림 8 시기별 자본주의 침체와 불황의 양상
자료출처: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연암서가: 2017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정상적’인 시기라면 (가)와 (나) 그래프처럼 경기가 후퇴했다라도 이전의 성장률을 다
시 회복. 성장-침체-성장이라는 경제학 교과서 패턴. 하지만 침체기(라), (마), (바)에는 그 이전의 성장률로
돌아가지 못함. 그만큼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 19세기 후반의 침체기는 술한 경기 부진 끝에 지나갔고(라),

1930년대 대불황은 전쟁으로 극복됨(마). 지금의 장기 침체가 어떻게 종식될 것인지는 알기 어려움.

-전형적인 경기 침체 v자형(1974-75), 더블딥 침체(1980-82), 1930년대 대불황 W(전쟁으로 회복) 등 침체 양상이었고, 2007년 이후 2023년 현재까지는 장기 불황¹¹⁾

-현재의 위기는 1970년대 자본생산성 하락과 이윤율 하락에 2007-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곤란에 처한 자본주의 재생산을 위해 투여된 엄청난 규모의 통화정책(연준 자산 9조달러)과 재정정책(8.8조달러)에 대한 분석 추가 필요. 2022년 미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3%로 1970년대 30%에 비해 크게 누적. 고금리 역시 위협적인 상황. 즉, 추가 재정정책의 여력도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우려 존재. 향후 이러한 대규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 즉, 장기침체와 부채위기 가능성이 존재.

3. 2023년 세계경제를 바라보면서 짚어볼 것들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5월 (A)]	[2022년 11월 (B)]	[2022년 5월 (C)]	[2022년 11월 (D)]
세계 ¹⁾	6.1 ¹⁾	3.5	3.1 (▼0.4)	3.6	2.4 (▼1.2)
미국	5.9	3.3	1.5 (▼1.8)	2.2	0.6 (▼1.6)
유럽 지역	5.2	2.8	3.0 (▲0.2)	2.4	0.0 (▼2.4)
- 독일	2.6	2.0	1.4 (▼0.6)	2.8	-0.8 (▼3.6)
- 프랑스	6.8	2.9	2.5 (▼0.4)	1.5	0.3 (▼1.2)
- 이탈리아	6.7	2.4	3.3 (▲0.9)	1.7	-0.3 (▼2.0)
- 스페인	5.5	4.8	4.3 (▼0.5)	3.6	1.0 (▼2.6)
영국	7.5	3.7	4.0 (▲0.3)	1.4	-0.2 (▼1.6)
일본	1.7	2.0	1.7 (▼0.3)	1.6	1.5 (▼0.1)
중국	8.1	5.1	3.4 (▼1.7)	5.3	4.8 (▼0.5)
인도	8.3	7.4	6.9 (▼0.5)	6.5	5.6 (▼0.9)
ASEAN 5 ²⁾	3.4	5.1	5.5 (▲0.4)	5.6	4.9 (▼0.7)
- 인도네시아	3.7	5.0	5.4 (▲0.4)	5.5	4.9 (▼0.6)
- 말레이시아	3.1	5.4	6.8 (▲1.4)	5.5	4.0 (▼1.5)
- 필리핀	5.7	6.4	6.4 (-)	6.2	5.3 (▼0.9)
- 태국	1.5	3.0	3.0 (-)	4.5	4.0 (▼0.5)
- 베트남	2.6	6.2	7.1 (▲0.9)	6.8	6.6 (▼0.2)
러시아	4.7	-9.5	-3.5 (▲6.0)	-0.3	-2.5 (▼2.2)
브라질	4.9	0.5	2.7 (▲2.2)	1.3	0.6 (▼0.7)

그림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전망

(자료출처: 안성배 외,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1) 핵심 이슈

(1) 미국 금리 어디까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최소 2024년까지 미국 5% 고금리 유지 예상. 미 연준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악화될 것을 전망하면서도 내년

도 금리가 올 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 즉,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표현.

Figure 2. FOMC participants' assessments of appropriate monetary policy: Midpoint of target range or target level for the federal funds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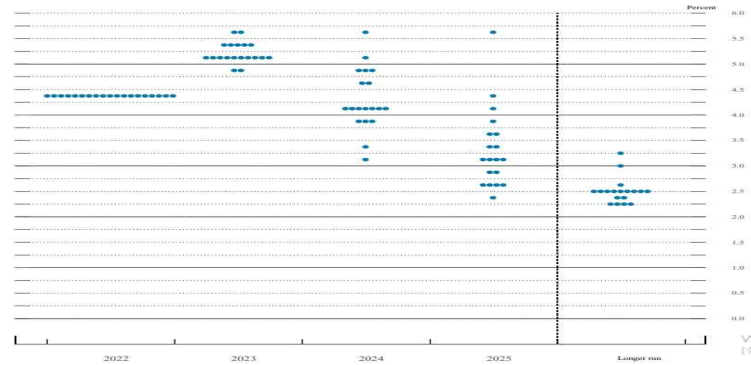


그림 10 2022년 12월 FOMC 점도표
(자료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12월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공개한 점도표¹²⁾에 따르면 2024년까지 현재 수준의 4-5%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파월 의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 강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전망이 나오자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나스닥 등 미국 주요 증시지수 일제히 하락.

(2) 급증하는 부채

① 달러공장 미국의 부채는 감당 가능한가

12) 18인의 연준위원들이 FOMC 직전에 예상하는 특정 시기의 금리수준을 무기명으로 적은 표. 연준은 년 4회 매분기 말 FOMC 회의가 끝난 후 점도표 공개. 기준금리는 18명 중 12명의 위원들이 1년 8회 6주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결정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美 부채



그림 11 미국 부채 경과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31조 달러(약 4경3933조원) GDP대비 121%로 폭증. 2020년 초에 비해 국가부채 규모는 8조 달러 증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강도 높은 긴축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미국이 엄청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1.2조 달러 18%), 중국(1조 달러 15%) 등이 거대한 외환 보유고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떠받쳐주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발권이익¹³⁾을 누리며 부채를 지탱. 하지만 미국 헤게모니가 흔들리고,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

② 일본, 30년만에 초저금리 기조에서 전환하나



그림 12 OECD 회원국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료출처: 서울경제신문)

-일본은 30년간의 경기침체 대응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1993~1994년 1.75%, 1995~2000년 0.5% 등 초저금리를 코로나19, 최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2022년(0.1%)까지 유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2022년 6월 현재 1255조 1932억 엔(약 1경 23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 이자 부담.
-하지만 최근 긴축으로의 기조 변화가 보임. 12월 20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

13) 화폐가치-화폐주조비용. 예를 들면 100달러짜리 지폐 주조비용이 30센트이면 발권이익은 99.7달러

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한다고 발표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신호로 비춰짐. 최근 일본 소비자물가 3% 인상, 세계 대다수 국가의 금리인상 등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을 버티지 못한 것 이라는 평가. 일본 금융시장이 30년만에 변화가 어떤 효과를 끼칠지 금융시장계 큰 손의 정책 변화에 전세계 이목 집중.

③ 중국의 또 다른 뇌관, 부동산시장에 물린 지방정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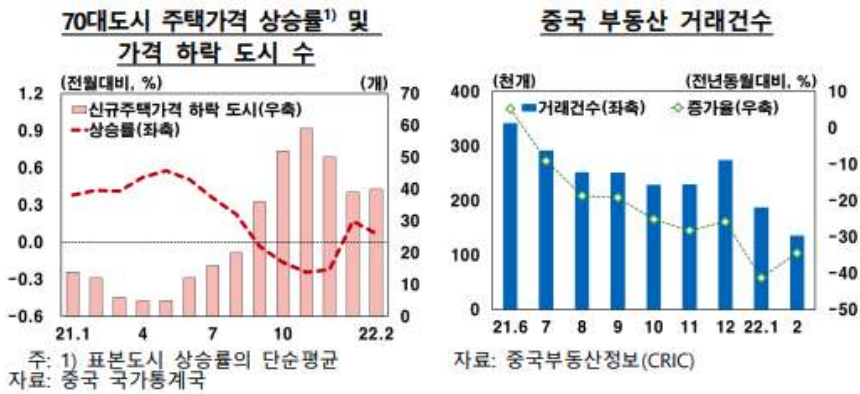


그림 13

(자료출처: 안성배 외,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치를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5.5%의 절반 수준인 2.8%로 전망.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침체’가 그 원인. 중국의 경기침체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침체. 중국 GDP 중 부동산 비중은 약 30%로 미국, 독일, 한국의 2배 정도로 큼.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 뇌관으로 급부상.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담당을 위해 설립한 지방정부유자기구(LGFV)가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¹⁴⁾. LGFV는 지방정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 지방정부의 빚을 대신 떠안은 이 부채의 공식 통계가 없어 ‘숨겨진 빚’으로 불림. 그림13에서 중국의 주택가격과 부동산 거래 건수 하락이 확인되듯. 최근 부동산 경기는 침체 중인데, 중국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 부양과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1조 위안(약 195조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가 역전될지는 미지수

④ 유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고인플레이션에 직면해있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2022.4월 1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 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물가 폭등(전년대비 9월 40.7%)에 힘입

14)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공사를 설립. 하지만 205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가 채권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것과 유사한 문제

어 10% 내외를 기록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57.5%. 원유가 96.2%, 천연가스 83.6%. 러시아 의존도는 역외 원유 수입의 29%, 역외 천연가스 수입의 43%로 절대적 비중. 2022년 겨울을 날 석유, 천연가스는 확보했으나 이후 상황에 따라 에너지가격 폭등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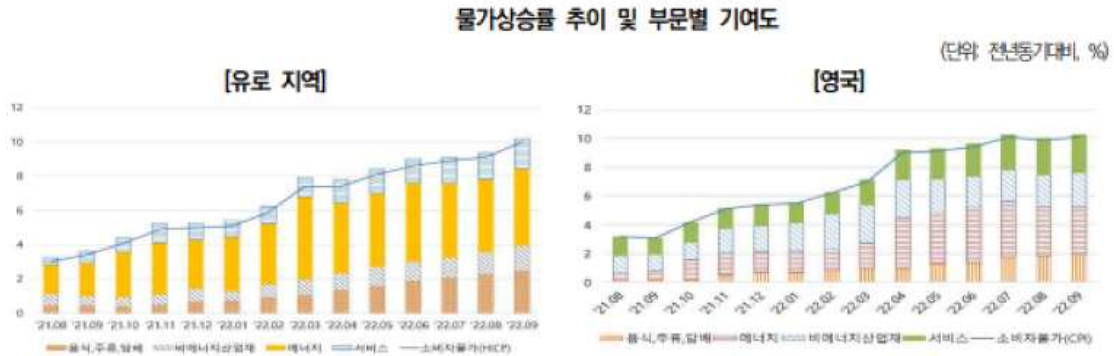


그림 14

(자료출처: 안성배 외,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영국, 휘청이는 왕년의 패권국가

-19세기 자본주의 패권국가였고 현재 GDP 규모 5위의 영국이 휘청이고 있음. 트러스 총리의 역대 최단기 사임 과정에서 드러나듯 현재 위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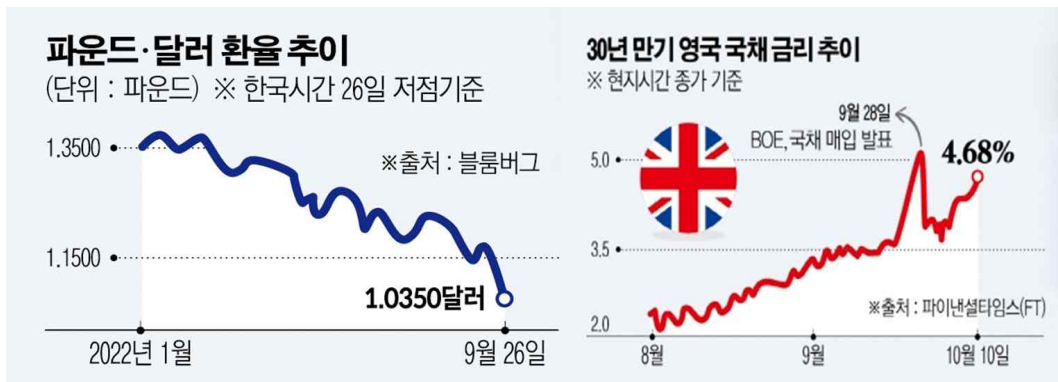


그림 15

-트러스 내각의 국제정세를 무시한 정책 시행과 총리 사퇴 과정은 다음과 같음.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50bp인생긴축→9.23 트러스 내각 50년 만에 가장 큰 대규모 감세안(약 70조원)+대규모 지출안(국채 발행) 구성의 정책 발표[완화]→중앙은행과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 시장 신뢰 붕괴(국채 팔기)→9.29 영국 30년만기 국채 금리 폭등(2.5%→5%), 파운드화 폭락(약 30% 절하¹⁵⁾)→영국 연기금 1500억 파운드 손실 및 연기금사들 파산 위기→9.29 영국 채권시장붕괴 몇 시간 전 중앙은행 무제한 양적완화 선언→경제혼란을 책임지고 10.20 트러스 총리 45일만에 사퇴

15) 35년만에 최저치 기록

○ Again 2011?! 남유럽 국가들의 높은 정부부채와 고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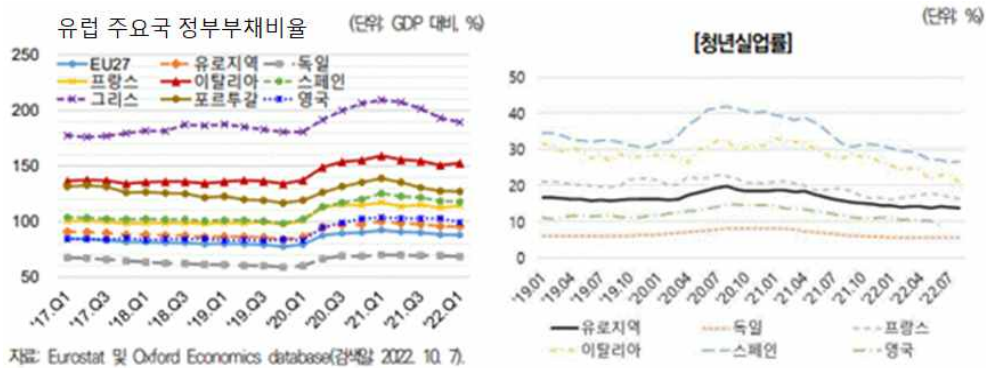


그림 16

-유럽의 약한고리였던 남유럽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최근에도 높게 나타나 위험. 이탈리아,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022년 8월 기준 21.2%, 26.6%로 유로지역 추세와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한국 경제 전망

(1) 저성장 고착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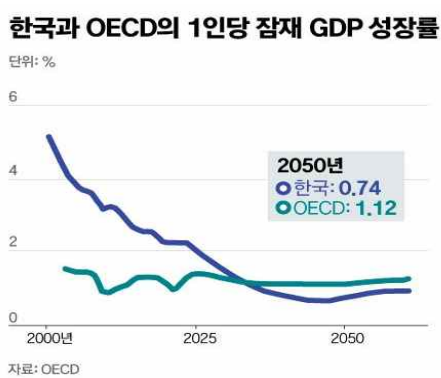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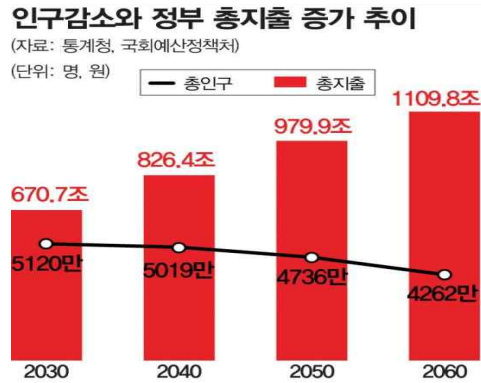


그림 17



-OECD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50년 0.74%의 저성장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고물가 위기로 더욱 고착화 우려. 저성장의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를 꼽을 수 있음. 2022년 2분기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전세계 저출산 1위를 기록(참고로 2012년 출산율 1.3명). 인구규모는 2020년 5,184만명 정점을 지나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4262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인구는 줄어들지만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의 의무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공적연금

등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지출은 2030년 총지출 639조원의 53.3% 355조에서 2060년 총지출 1109조원의 60% 665조로 늘어나 경제 성장에 심각한 장애 요인.

(2) 노동자 내 양극화 심화



자료: 산업노동정책조사

그림 18

(자료출처: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2-44호 최근 임금 흐름에 대한 평가 및 가격전가율 추정」 2022.12

-명목임금의 증가 요인 중 상용직 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과 임시일용직 임금(임시일용임금) 요인의 기여도가 다름. 그림1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용직만의 임금인 특별급여, 정액급여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현 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격차 축소 대책이 필요.

(3)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2022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 규모 1869조원. 부채 보유 가구당 평균 1억3661만원. 미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빚을 내 투자한 많은 사람이 심각한 위기에 놓임.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 시 전체 대출이자 약 13조원 증가.

부채 분류별 GDP 대비 부채 규모 시각화

■ 중동/아프리카 ■ 아시아 ■ 유럽 ■ 북미 ■ 남미
 ※ 원의 크기는 GDP 대비 부채비율에 비례하며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그 규모가 큰 (2022년 4분기 기준)



그림 19

(자료출처: 이진원, 부채의 늪, 포브스 2022.3.23. 등록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5757>)

- 6) 장원재, 이슈&인터뷰, “정치철학자 이진우 교수가 말하는 ‘전쟁과 평화’”, 월간조선 2022년 11월호
-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전 2% 후반대에서 8%대로 3배 이상 증가. 2021년 말 기준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는 38만1000가구로 전체 대출가구 중 3.2% 차지.
- 최근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도 고금리 정책으로 확대되는 추세. 고금리가 주택 매매가를 하락시켜 전세가보다 낮아지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 속출. 또한 2022년 4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거래 비중이 전세 49.6%, 월세 50.4%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 역전 현상이 일어남.

(4) 2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연간 무역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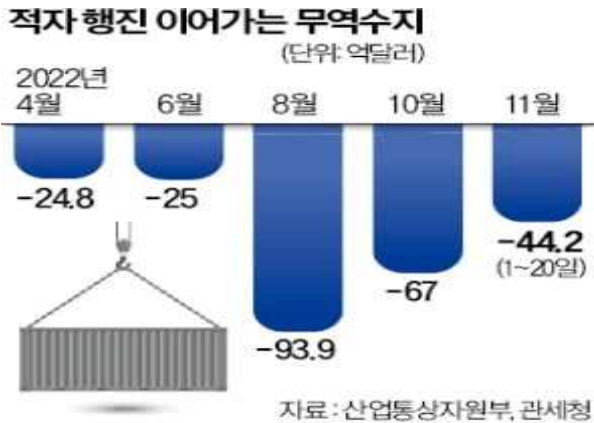


그림 20

-2022년 무역적자는 연간 최대였던 1996년(206억2000만달러)의 두 배를 뛰어넘어 4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8개월 연속 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5년 만의 일이고, 연간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4년만. 4000억달러를 상회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했을 때 450억 달러 적자가 당장 내년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준은 아님. 하지만,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외환시장이 불안정하고, 9월에만 원

-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개입으로 한 달간 외환보유액이 196억6천만달러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 중 하나.

(5) 한계기업 확대로 우려되는 고용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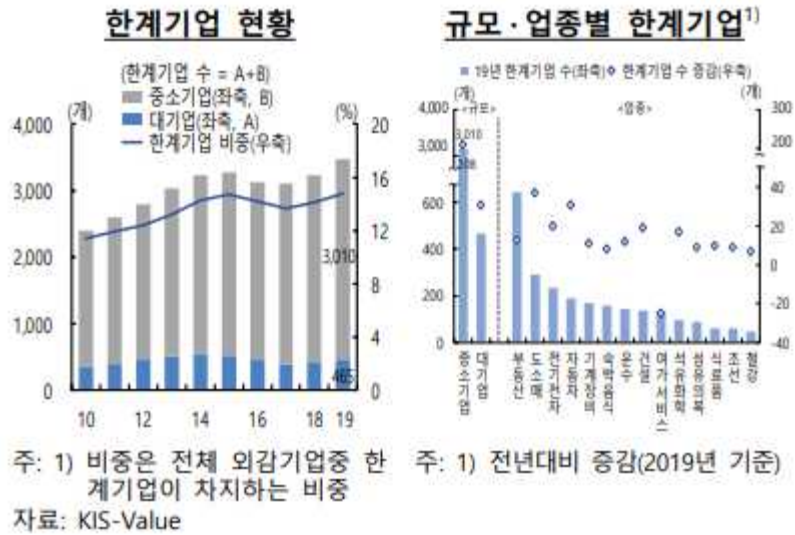


그림 21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0년 9월) 보도자료)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¹⁶⁾은 2019년 3,475개(전체 14.8%)로 전년 2018년 3,236개(14.2%) 대비 239개 (7.4%)가 늘어나 201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많이 증가(+208개, 대기업 31개)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서 크게 증가. 2020년 중 코로나19로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 2022년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한계기업의 이자부담액을 급격히 높이고, 중소기업 사업장의 고용불안 가중될 것으로 예상.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 72.9%인 점도 위험요소.

4. 요동치는 경제위기 정세,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1) 지난 경제위기 대응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본주의는 내재된 구조적 모순 때문에 경제위기들이 발생해왔고, 한국 역시 커다란 고통과 변화를 겪어옴.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을 비판

16)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역이입/이자비용) 1미만인 기업. 즉, 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적으로 검토하면서 현 시기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함.

(1) 민주노총 역대 경제위기 대응 평가¹⁷⁾

① 기업별 대응의 한계: 1998년 IMF 구조조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투쟁

-민주노총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강력하게 추진된 구조조정에 맞서 강고하게 투쟁을 진행. 정부의 노동유연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 등을 진행했고, 대기업 정리하고 반대(현대자동차(1998년), 대우자동차(2000년)) 혹은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반대(조폐공사 구조조정(1998),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파업(2000), 철도/가스/발전 공동파업(2002)) 투쟁이 진행됨.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통해 기업 내 수 만 명의 일자리를 지켰지만, 정세 판단 오류로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노동유연화 3법(정리해고제, 탄력근로제, 근로자피견제)을 내주고 민주노총/전교조 합법화 및 사회보장(고용보험 등) 확대를 교환하는 오류를 범함.

-노동유연화는 미국식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IMF와 한국 지배세력의 프로젝트였으나,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노동유연화 분쇄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교환. 민주노총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사정위 탈퇴, 가입 반복, 정부의 합의 미이행,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등 내부의 극렬한 반대를 거치며 이후 사회적 대화의 장벽이 높아짐.

-결과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시장 재편'에 걸맞는 총노동 차원의 대응이 안되고, 조직된 노조의 기업 내 고용을 방어하는 수준의 투쟁을 진행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음. 정권과 자본은 개악된 법제도를 활용해 고용이 보장된 조직된 노조를 우회하기 위해 자동화, 모듈화,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확대로 대응. 총연맹은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등으로 대응해 일정 정도 성과를 내지만 노동자 내부 격차 축소에는 역부족.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으로써 쌍용차 정리하고 투쟁(2009),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투쟁(2011)이 상징적으로 중요했음. 또한 (금속)산별노조 건설 후 중요한 투쟁의 계기로써 시험대였기도 함. 두 투쟁은 기존 기업별 고용보장 투쟁의 경향을 반복, 강화하였음. (기업 내 정규직/비정규직)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77일간의 도장공장 옥쇄 투쟁, 309일간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등 기존 민주노조 운동의 전투성은 더욱 이상화·영웅시됨.

-'총고용보장' 요구는 금융위기 시기 전산업적으로 진행되던 고용불안의 문제를 노조가 있는 사업장 울타리 내로 가둔 효과가 있었고, 기업을 넘어서는 산업적·지역적 고용유지 요구나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는 상대화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주목해볼 수 있음

② 전체 노동자계급 대변의 전략은 무엇인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결정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17) 박준형, 『2022노동운동포럼』의 발제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 평가」(사회진보연대, 2022)를 주로 참고하였음

-직선 2기 김명환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조건이 조성되기도 함. 2018년에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약이 맞물리며 경사노위 참여 건이 부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경제위기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추진되었지만 최종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인 사회적 대화 국면은 소멸.

-김명환 집행부가 추진한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드러냄. 3월 10일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및 대정부 교섭> 기자회견의 요구안은 기존 민주노총 요구에 방역 대책이 포함된 수준이었고, 주요 활동가들이 V자 회복을 낙관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분석과 정세인식이 부족했음. 집행부는 정부와의 ‘대화’에만 집착하며 내부 논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지도력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조직적 관심 역시 부족했음. 대의원대회 부결과 김명환 집행부의 총사퇴 후 언론, 정부는 대화 파트너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공격을 쏟아냈고,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부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김.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원포인트 대응 사회적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 ‘전태일 3법¹⁸⁾ 쟁취’가 다시 하반기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음. 전태일 3법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중요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달랠어야 함. 보건의료체계 지탱을 위해 거리두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던 134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 존재, 교섭 권리보다는 고용 보장이 중요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를 감안한다면 전태일 3법은 전략적으로 뒤로 미루고 정세에 걸맞는 요구로 투쟁했어야 함. 즉, 문제는 전태일 3법 자체가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의 활동에 큰 변화가 없는 민주노총의 물질적 인식. 민주노총의 ‘정세분석의 부재와 주체의지의 과잉’은 중요한 평가 지점.

(2) 시사점

-경제위기 시기에 권력과 자본은 기업의 벽을 넘어 노동시장 혹은 사회 전반을 재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세.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기업의 울타리 안에 갇혀 기존 방식을 반복하거나, 사회적 대화기구를 둘러싼 ‘허구적 쟁점’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지난 3차례 경제위기 대응의 시사점. 그 결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전체 노동자계급 대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취약층 노동들을 조직하고 보호하며 노동시장과 산업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위기의 시기에 민주노조 운동의 변화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중요한 토론과제.

2) 해외 사회운동의 경제위기 대응 시사점

(1)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맞서 국가에 개입한 이탈리아의 사례¹⁹⁾

18) ▲근로기준법 11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탈리아노총(CGIL)은 총연맹의 압박과 현장투쟁에 힘입어 2020년 3월 14일에는 노사정 대표자가 18시간 화상교섭한 끝에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업장 수칙」 합의 도출. 주요 내용은 ▲보건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안전을 위한 사업장 출입절차 확립 ▲원격근무,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휴가사용 방안 등 업무조직 변경 ▲유증상자 관리 방안 등.

-또한 생계·소득 보장을 위해 ▲비상사태기간 동안 해고금지 ▲해고 않는 기업에만 세제혜택 부여 ▲공공(의료)부문 신규인력 확충 ▲조업 중단 시 임금 보장하는 ‘사회적 완충조치’ 전산업 확대 등 정부에 제안하였고 정부는 이런 조치를 반영해 2020년 3월 16일 공포한 위기 대응 긴급 조치 「이탈리아를 치유하자」(Cura Italia)에 ‘한시적 해고금지²⁰⁾’ 등 대폭 반영.

(2) 고물가에 대응하는 해외 투쟁 사례

① 실질임금 하락에 맞선 투쟁

-여러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 벌어짐 ▲영국 런던교통공사노조(인원축소, 연금개약 반대). 철도, 공항 등이 노동자 파업, ▲벨기에 “임금이 아니라 물가를 억제하라” 요구 하며 교통, 공교육, 공항 부문에서 파업, ▲프랑스 CGT는 6월 토탈에너지 노동자 3.5만명 24시간 파업, 철도, 파리교통공단, 마리오노(화장품기업), 교사, 공항노동자 등 파업 ▲이탈리아 5월 교육부문 파업, 6월 운송부문 파업 ▲스페인 금속, 의료 부문 파업인플레이션에 맞서 금속(제조업) 등 여러 부문 파업 등

19) 류미경, 『계간 사회진보연대 171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사회운동, 2020)

20) “동 법률명령 발효일부터 223호법 (1991년 7월 23일 발효) 4조, 5조, 24조에 따른 절차 개시를 60일간 배제하며 2020년 2월 23일 이후 개시된 절차는 진행을 보류한다. 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주는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604호법(1966년 7월 15일) 3조에 따른 ‘정당한 객관적 이유’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가 필요한 고용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223호법에 따른 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집단 정리해고를 뜻하며, 604호법에 따른 해고 중 ‘정당한 객관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생산 방식, 노동조직의 편성 및 그 규칙이나 기능상의 이유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4월 6일자 「유동성 지원에 관한 법률명령」(Decreto Rilancio)을 통해 연장된다. 특히 「이탈리아를 치유하자」 법률 명령을 통해 60일 한도로 도입된 해고금지 조치는 2020년 8월 17일까지로 연장되었고 고용유지 및 소득보장 기금으로 160억 유로가 추가 투입되었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공연예술인, 농업노동자 긴급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 및 빈곤가구 긴급 지원 역시 연장되었다.

② 고인플레이션과 독일의 임금협약 사례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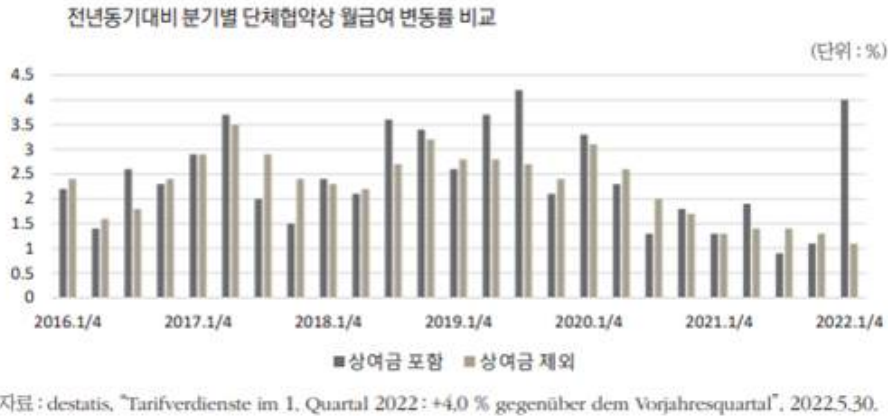


그림 22

-독일 산별노조 단체협약 특징은 물가 수준에 연동한 기본급 인상. 표에 볼 수 있듯 최근 임금인상은 일시적 특별 상여금 인상을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이 이례적이며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 현 인플레이션이 공급 부족에 기인한 물가상승이고 공급 정상화 후 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노사 간 일정 정도 합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콘도르항공 노조의 경우 물가연동 임금인상 합의(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7% 인상되며,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9%까지 인상)를 진행.

-독일노총(DGB)은 솔츠 총리가 제안한 <공동행동(die Konzertiere Aktion)>모델에 참여해 정부(총리)-노조(노총대표)-사용자(독일경영자협회) 및 정치인, 전문가가 경제안정화를 위해 논의. 이날 회담에서 현 물가인상의 요인이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참가자들이 동의했지만, 향후 임금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남음.

-산별노조들의 특별급여 중심 임금협약과 <공동행동>의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총과 산별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여 현 정세의 요인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은 주목할 부분.

③ 영국노총(TUC)의 '모두를 위한 임금 인상'²²⁾

-영국노총은 ▲2008년 보다 실질임금 월 88파운드 저하. 시간당 15파운드 최저임금 ▲공정임금협약(즉 산별 협약)을 통한 산업 수준의 임금 인상을 가능한 산업부터 쟁취하고 협약 적용을 확대²³⁾. 참고로 영국은 전통적으로 산별 아니라 기업별 노사관계 제도 ▲구인난 해결하고, 노동자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평생 학습 및 기술 전략 마련 ▲단기 주주 환원 보다는 장기지속가능투자, 성장 우선시하는 지배구조로 개혁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 촉진, 성장 창출하는 거시경제적 접근할 것을 정부에 요구

21) 강하림, 『국제노동브리프 2022년 9,10월호』 「독일의 물가상승과 노사 간 임금협상」, 노동연구원: 2022

22) <https://www.tuc.org.uk/research-analysis/reports/raising-pay-everyone>

23) 공공부문 우선 적용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보임

3) 제안

-경제위기의 시기 실질임금 방어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함. 하지만 이례적인 경제위기 시기에는 기업별 대응을 넘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 하나는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는 투쟁. 조직된 노동자의 역량을 활용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과제.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 시기 노동시장 재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총연맹, 산별노조 차원의 역량과 계획 마련. 노동자계급을 대표해 취약계층의 고용,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요구 및 개입 필요.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면서 경제체제의 진보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리더십 형성해야 함.

(1) 위기 시기 더욱 벌어지는 노동자 내부 격차 축소를 위한 임금투쟁 방안과 총연맹 역할 정립

-최소 향후 2-3년의 고물가-고금리, 장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의 실질임금 방어 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더욱 벌어지는 격차 축소를 위한 임금투쟁 방안 모색. 특히 기업별 노조의 벽을 뛰어넘기 위한 총연맹 혁신에 대한 진지한 토론.

(2) 위기 시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입 방안

-한계기업의 확산 등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표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 방안 마련 ex>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입과 조직화 사업

(3) 거시경제 제약 하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우선순위 요구 마련

-고금리, 긴축의 시기에 정부의 재정정책 한계²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조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지출 우선순위,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대안 마련

(4) 중장기 경제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 마련

-중장기적 경제변화(현 경제위기의 장기화, 2030년 0%대 저성장 예상,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노동자 서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개입 필요

(5) 대안적 경제체제를 위한 연구와 토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붕괴되고 있지만 대안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상당히 후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취약계층부터 긴축 정책의 고통을 받는 현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끝.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정한 결과는 [임금률의 인상이라는] 직접적 성과가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그들의 단결이다.

-마르크스, 『공산주의자 선언』

24) 현 정세와 상반된 부자감세, 양적완화 정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뻔 한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